

尹, 9년만에 다보스포럼 참석 등 스위스에서 '경제외교' 돌입

UAE 순방 후 3박4일간 스위스 방문 CEO 간담회, 한국의 밤 등 일정

윤 대통령, 다보스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강화 등 연대의길 제시 예정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경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3박 4일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글로벌 CEO들과의 오찬 간담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한국의 밤'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UAE에서는 40여년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100년 미래 기약을 했다면, 이제 다보스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취리히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 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최근 기술 패권경쟁과 지정학적인 갈등,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약화 등으로 국제무역이 분절화됐다"며 "공급망도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각 나라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공

급망 체제에서의 자국 위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식량·에너지 위기, 디지털 격차도 모두 인류 공통의 위기로 다가서는 도전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친 복합위기에서는 어느 한 국가, 한 기업

만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연대와 협력만이 위기에 맞설 해결책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유수의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참석한다.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대응 ▲고물가·저성장 등 경제 대응 ▲산업 역풍 대응 ▲사회적 취약성 대응 ▲지정학적 위기 대응 등 5개의 핵심 논의 분야를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9일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18일에는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순방 전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해외에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텔라, 소니, 셀, 그랩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다보스에 모인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이니셔티브를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함께 홍보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석학들과 만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한 뒤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60년 만에 인구 첫 감소... 현금수당 등 출산정책 '괴리'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선전시·산동성·후베이성 등 출산 보조금, 육아휴직 등 지원
인구 총 14.1억, 전년비 85만명 ↓
"앞으로 中 인구 더 늘지 않을 것"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당분간 추세를 되돌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수당 등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괴리가 크다. 당장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태어난 2016~2017년 생들이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학교는 부족하고, 여전히 허락한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처벌은 받지 않을 뿐 각종 혜택에선 제외된다.

18일 중국 선전시에 따르면 자녀 셋째부터는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현금수당 1만9000위안(한화 약 350만원)을 지급기로 했다. 자녀 첫째와 둘째에게도

각각 연간 7500위안(한화 140만원)과 1만1000위안(2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산동성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는 158일의 출산휴가와 함께 3살이 될 때까지 매년 부모 각각 10일 이상의 육아휴가를 쓰도록 했다. 또 양육 수당으로 매월 600위안(한화 약 11만원)을 지원한다. 중국 후베이성의 이창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자녀 1인당 월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의 보육 보조금을 지급기로 했다.

전일 중국국가통계국은 전체 인구가

작년 14억1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들은 당국의 발표 직전에 출산 지원책을 서둘러 내놨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았던 마지막 시점은 1961년이다. 대기근이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960년에 약 1000만명, 1961년에 340만명 감소했다가 1962년에 1440만명 증가로 반등했다.

2021년 1000명당 7.52명이던 출생률은 2022년 6.77명으로 하락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35년간 고집하던 '한 자녀 정책'을 철회한 것이 지난 2016년이며, 2021년에는 부부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녀를 더 낳는 것도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보육이나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는 "앞으로 중국의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며,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소수의 가정만이 셋 이상의 자녀를 원하더라도 무제한 출산을 장려해 출산 정책의 완전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Since 1996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체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의류/화장품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및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30년 역사 헛터그룹

BH 대한홍삼 [주]
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정보공개 의무보다 처벌 강화해야”

» 1면 '코스닥 상장사 잇단 횡령·배임'서 계속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02% 수준으로 멜파스는 사내이사 배모씨, 전무이사 이모씨 등 6명을 고소했다.

지난 13일 지티지웰니스는 2억7167만7336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노시스는 56억원 상당 규모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 배임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에는 2000억원대 횡령으로 시장에 충격을 미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을 시작으로 총 13건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횡령·배임이 8건이나 발생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은 감사위원회 미설치, 내부 신고 절차부터 내부고발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부 신고제 도입과 운영이 미흡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 기업에 적용되는 잣대를 코스닥 시장으로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자체의 취약이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만큼 관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 배임 사고가 없는 기업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업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정보 공개 의무 부여보다 배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융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 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